

# “신성장 핵심 태양전지 산업 양보 못한다”

## ‘5+2’ 선도산업 ‘태양전지’ 대구·경북권과 중복 광주시·전남도 유치 논리 개발 등 대책 마련 나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과 관련, 호남권(광주시·전남도·전북도)과 대경권(대구·경북)의 산업 중복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호남권은 관련법에 명시된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부합하는 사업내용과 사업명을 채택한 만큼 호남권 사업은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법률적 지원근거와 명칭도 없는 대경권의 ‘그린에너지 산업’은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명칭은 다르지만 양 권역 사업의 핵심은 태양전지 부문으로 사실상 같다.

23일 광주시를 비롯한 호남권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지식경제부가 호남권의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대경권의 IT융복합, 그린에너지 사업 등 5+2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을 확정했다. 정부는 선도산업에 3년간 9천억원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호남권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사업인 태양전지 부문이 대경권의 그린에너지 산업에도 포함됐다. 호남권은 실리경제 태양전지, 화합물 태양전지 산업, 대경권은 결정질 실리경제 태양전지, 화합물 박막태양 전지 등 사실상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확정 과정에서 양 권역의 세부 사업 조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지경부가 최근 사업 조정과 관련해 호남권과 대경권 관계자, 전문가 그룹이 참석한 컨설팅 자리를 마련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호남권에 불리한 내용의 산업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호남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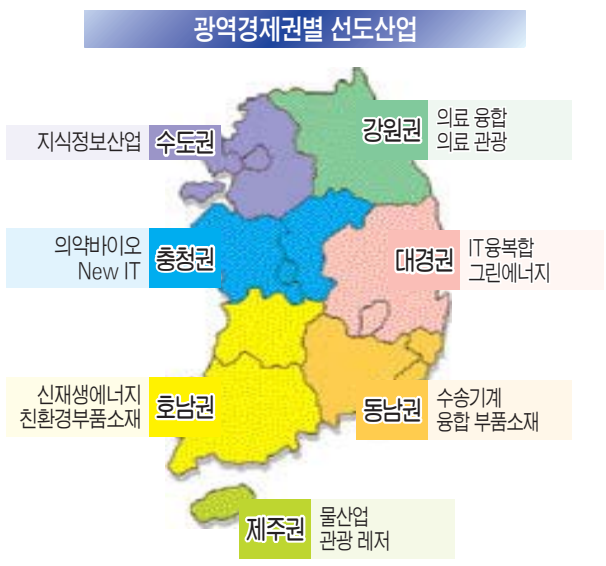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전북과 전남 지역에 풀리실리콘 공장이 건설중이어서 호남권은 태양광 소재쪽이 더 나은 것이다. 반면 대경권은 전지업체가 많은 만큼 태양 전지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광주시 관계자는 “호남권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근거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태양에너지 산업 부문을 선점하고 있다”며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인 태양전지 부문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남권은 이날 말까지 선도산업의 구체적인 지경부에 제출, 태양전지 분야는 대경권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간담회를 갖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핵심인 태양전지 및 태양전지 제조장비 등의 사업을 유치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리를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지사는 또 “전남도를 미래 국제적인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R&D 시설이 절실한 만큼 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라”고 강조했다.

호남권은 정부가 현재 권역별 사업안을 존중,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화전략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호남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태양전지 부문은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감안해 반드시 호남쪽으로 와야 한다”며 “지역 산업의 특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산업을 추진하는 만큼 지자체에 사업을 맡겨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권 지자체는 5+2 광역경제권의 호남소외를 주장하며 선도산업 계획서 제출을 거부해오다 지난 10일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첨단부품소재 산업 육성 계획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함으로써 정부와의 갈등을 마무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학업성취도 평가 보완 지속”

### 李대통령 “점수 위주 대입 방식 바뀌어야”

#### 안교육 성적 조작 사과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학업성취도 평가 논란과 관련, “학교별로 처음 시행되다 보니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다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번에 나타난 문제를 보완해 내년부터 완벽한 평가체제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제9차 라디오 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학교와 선생님들 사이에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도록 할 것이고 잘 가르치는 학교, 발전이 더딘 학생들을 끌어안고 분투하는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분명한 것은 학력평가 자료를 가져와 맞춤형 교육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성취도 평가를 계속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입시 제도에 대해 “현재와 같은 점수위주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우리의 대입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점수는 좀 낮더라도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입시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돼야 하나 그 자율은 사교육을 조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도 선별방식을 다양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3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조작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과부 업무보고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시험을 보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인해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불편을 느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과·교강 인사에 연계시킨다는 교과부의 방침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에 대해 “교원 인사를 이것으로 정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日, 여수박람회 참가 공식 통보

### 李대통령, 아소 다로 총리와 전화 통화

일본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참가를 공식 통보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는 23일 전화통화를 갖고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북핵문제와 경제협력 확대 등 양국간 공동현안을 논의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일본측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10분동안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아소 총리는 “여수박람회에 일본이 참가하는 것을 24일 각의에서 공식 결의하기로 했음을 미리 알려 드리려고 전화를 했다”면서 “여수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

보한 나라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아소 총리가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빨리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한데 대해 “실무준비를 서둘러 이른 시일안에 방일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소 총리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세계문제와 북핵문제 등 국제적 현안에 대처하는데 있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하자는데 이 대통령과 내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겠다”면서 “특히 한일 양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직업훈련, 농업지원 등 공동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키로 했다는 사실도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재계 “감원 자제” 노조 “파업 자제”

### 노사민정 위기극복 합의 민주노총 불참 實效 의문

노·사·민·정이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합의문은 각 경제 주체들이 서로 고통을 나누는 방식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한 측인 민주노총과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불참했기 때문에 합의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유지 위해 고통분담 =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동결·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측은 불법파업을 근절하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에서 열린 ‘제2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노·사·정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대표자들이 합의문을 낸 뒤 다함께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을 자제하기로 했으며, 경영계는 이에 화답해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또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방적 감원보다는 희망퇴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노사민정은 채권금융기관들이 노사의 고통분담과 일자리 나누기 노력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서약했다. 이번 합의문에서는 아울러 정규직을 대신해 경제위기의 일차적인 피해계층으로 꼽히는 비정규직,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의지도 천명됐다.

◇정부 추경예산으로 기존 제도 보장 = 정부가 이번 합의문에서 도입하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대책은 없지만 추경예산을 반영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지원 규모를 미리 제시할 수는 없다”며 “관계부처는 예산이 합의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총리실에서 모든 걸 점검하는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도의 틀에서 추경예산을 반영해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 실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불참으로 실효 불투명 = 노동계의 한 측인 민주노총이 끝내 불참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합의의 핵심은 노동자 임금삭감”이라며 “이는 경제위기를 경제파탄으로 몰고 가는 대단히 위험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